

이제는 인천! 인천의 주권을 찾아서 21대 국회의원선거

#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

## 【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】

### 1. 정치 주권

-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위해 ‘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’ 적극 추진
  - ▲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등을 일괄이양 받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.
  - ▲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청, 해양수산청, 환경청 등의 기관사무 조속 이양 추진.
-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
  - ▲ 지방정부의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.(인천국제공항공사 등)
  - ▲ 시장의 인천 항만공사 항만위원 추천 몫 확대 및 사장 임명 시 협의권한 현실화.
- 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
  - ▲ 인천과 부천·김포 포함 430여만 명의 사법관할 인구와 연간 2,100여건에 이르는 인천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인천고등법원 설치 절실.
  - ▲ 우리나라는 세계해운 6위국인데 해사법원 없어 해상분쟁 발생 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 의존. 분쟁해결 비용의 해외유출이 최소 3천억 원. 해상분쟁은 국제분쟁이어서 항만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이 최적지임.

### 2. 경제 주권

- 항만·공항·경제자유구역 및 용진·강화, 수도권 규제 제외
  - ▲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기간시설·경제구역이기에 제 역할 하도록 수도권 규제 제외.
  - ▲ 군사 규제 받고 있는 접경지역 도서가 수도권 규제 대상인 것은 국민적 공감대 얻기 힘들.
-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위해 공항공사가 MRO, 공항경제권 개발 가능하도록 법 개정
  - ▲ 일일 1천회 이상 항공기가 운항하는 인천국제공항. 하지만 정비 불량에 따른 결항률 급증.
  - ▲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항안전 위한 항공기 정비(MRO)사업, 공항·항공 산업 인재 양성 위한 교육 훈련 지원사업, 공항경제권 개발사업 등의 목적사업 가능하도록 공사법 개정 시급함.
  - ▲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 위해 접근성 제고할 수 있는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필요.
-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
  - ▲ 해양·항만·수산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 심화.
  - ▲ 인천항 배후부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타 항만 대비 3~10배가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, 인천신항 등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시급함.
-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광역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
  - ▲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여론 반영한 정부지원 대책(감면/면제) 필요.
  - ▲ 물류 경쟁력 제고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해야.

### 3. 환경 주권

#### ○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·에너지·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

- ▲주민의 생명권·환경권·재산권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해 인천 집중현상 해소대책 마련 절실.
- ▲지역자원시설 현실화, 현행 주변지역 지원책 등은 차선. 기존 전력·에너지·쓰레기 정책전환 필요.
- ▲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 확정 및 대체매립지 확보 시 환경부의 주도적 참여 추진해야.
- ▲영흥도 석탄화력 발전소 1·2호기 폐쇄 및 청정연료발전소로의 대체 대책 마련해야.

#### ○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

- ▲팔당호 수질개선 위해 한시적으로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이 준조세로 변질. 수질개선보다 상수원 주변 땅 매입(적설성), 하류지역 지원 역차별(형평성) 등이 문제제기 되기에 개선방안 강구해야.
- ▲적수사태는 전국적인 문제임. 지방정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으로 적수사태 후속대책 마련은 한계 있어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절실함. 연장선상에서 한강 수계기금 활용방안도 모색해야.

### 4. 교육 주권

#### ○ 국립인천해양대학 및 '인천'국립과학기술원 설립

- ▲해양대학(부산·목포)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(접근성)가 취약함. 이에 수도권 인재 양성 위해 항만·해양도시인 인천에 해양대학 신설해야.
- ▲과학기술원(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)은 각각의 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돼 정부가 관할하는 특수대학. 현재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, 한국과학기술원(대전) 등 있으나 수도권에는 없어 인천과학기술원(INIST) 설립이 필요함.

#### ○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소재 대학졸업자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

- ▲인천항만공사, 한국남동발전(주) 등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재채용 기준이 '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' 및 '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'에 따라, 인천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. 가점 폐지 등 제도개선 시급함.

### 5. 문화 주권

#### ○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 위해 KBS 수신료 인천 환원 및 방송법 개정

- ▲KBS수신료 납부현황(2015년도 기준, 납부액 및 비율)을 보면, 경기(1,241억, 19.8%), 서울(1,170억, 18.7%), 인천(516억, 8.3%), 부산(502억, 8%), 대구(429억, 6.9%) 순.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배정액(2017년 기준)을 보면, 서울(2조6,665억), 경기(1,696억), 부산(586억), 강원(443억), 대구(393억) 순인데 인천(89억)은 충남(43억)에 이어 최하위.
- ▲방송법 제70조(채널의 구성과 운영) 4항에 "지역채널에서는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,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·논평은 금지한다."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밀착형 케이블TV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함.
- ▲열악한 지역 언론환경 개선 위해 인천시민의 소중한 수신료 환원방안(인천KBS 건설 등)을 찾는 한편 해설·논평 금지 조항도 개정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케이블TV로 역할 하도록 해야 함.

#### ○ 해양문화도시 인천 위해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

- ▲부산 정치권은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(안산→부산 영도로 이전) 부설기관이라며 부산 이전을 요구함. 최근엔 역할분담론(북극 연구 분리)을 내세워 제2극지연구소 부산 설립을 주장함. 게다가 제2쇄빙연구선 모항 부산 유치를 통해 제2극지연구소의 설립 명분을 확보하려고 함.
- ▲하지만 인천소재 극지연구소는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독립적인 '한국극지연구원'으로 확대, 설립돼야함. 또 인천항은 아라온호의 모항이기에 남·북극의 효율적인 통합연구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모항도 인천항으로 지정해야함.